

2024년 북한경제와 선택의 길

이석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uklee@kdi.re.kr

I. 서론

2024년 북한경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물론 한국은행은 2023년 북한의 GDP 성장률을 3.1%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북한경제는 2022~23년을 기점으로 코로나 봉쇄에서 벗어나 일단 수치상으로는 반등하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북한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마치 리-오프닝(Re-opening) 이후의 중국경제처럼 그간의 내재적인 문제점들이 모두 한 번에 터져 나와 경제 전반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로 인해 2024년 현재의 북한경제가 비록 그간의 코로나 봉쇄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북한경제는 왜 이렇게 안 좋은 모습과 전망을 그렇게도 오랜 기간 보이는 것일까?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초·중반 기근(famine)을 동반한 극심한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후 현재까지 무려 30년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2010년대 초·중반 중국과의 교역을 등에 업고 반짝 경제가 좋아지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2016~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이후 다시금 새로운 경제적 고통이 엄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을 관찰하는 외부의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대부분 공통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다. 북한 당국이 핵을 가지려는 의도로 끊임없이 국제사회와 대결하기 때문에 북한경제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의 개혁과 개방은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북한의 핵문제와 정치·안보적인 사안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답이 옳다면 북한경제의 미래는 암담하게 보인다. 매우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현재 북한에서 생활하는 어떤 세대들은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현재와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 평생을 경제적 고통에만 시달릴지 모른다는 공포감마저 들기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처럼 암담한 북한경제의 미래에 대해 이제 모두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언젠가부터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글은 북한경제를 둘러싼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바람에서 비롯되었다.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논의 속에서만큼은 여전히 북한경제의 개혁과 개방의 가능성을 찾고, 이를 통해 북한 스스로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이제는 진부해 보일지도 모르는 개혁과 개방이라는 주제를 2024년 현재의 북한경제에 되살려 적용한다. 2024년 현재의 북한경제가 과연 개혁과 개방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북한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반대로 여전히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반대의 길로 나아갈 경우 북한경제는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 글에는 약간의 사연이 있다. 올해 초 필자는 과거 KDI에서 같이 북한경제를 공부했던 두 분의 젊은 연구자를 만났다. 한 분은 중국경제를, 다른 분은 베트남을 연구하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북한경제의 현실을 안타까워했고, 언젠가 북한도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나서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에 북한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의 개혁개방의 모습을 다루는 논문들을 같이 만들어 KDI 북한경제리뷰에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비슷한 의견을 가진 두 분의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모두 다섯 편의 논문이 만들어졌다.¹⁾ 그런데 이들 논문의 발표 시기에 즈음하여 북·러 간 안보조약이 체결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자칫 이들 논문이 현실 상황과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위험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현재에도 사라진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읽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들 논문이 ‘여전히 뜬금없고 엉뚱하게’ 보일지 모른다. 부디 이 논문들이 너그럽게 읽히기를 기대한다.

1) 이 글과 더불어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7월호에 같이 발표될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말한다. 이원경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 사회적 성과」, 김유리 「도이머 이후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변화: 분야별 지표와 주민 생활 변화 사례」, 김미연 「북한의 민생경제 현황과 비핵화 이후 변화 가능성 - 중국의 민생경제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 이해정 「개혁과 개방에 따른 북한 관광부문 성장효과 및 생활 변화 추정」.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2024년 현재의 북한경제를 논의한다. 그리고 현재 북한경제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비핵화와 개혁개방이라는 긍정적이고 국제사회 친화적인 형태로 나타났을 경우 미래의 북한경제 모습을 추적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가능한 개념적 논의와 더불어 이를 수치로 전환했을 때 보여지는 미래의 북한경제 모습 역시 간단히 시뮬레이션한다. 4장에서는 미래의 북한경제가 개혁개방이 아닌 북·러 협력과 같은 또 다른 길로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II. 2024년 북한경제와 진실의 순간

북한경제는 2022~23년을 기점으로 그간의 코로나 봉쇄에서 벗어나 대외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이후 북한의 대외교역규모는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의 GDP 성장률은 3.1%를 기록하였다. 지난 3년의 코로나 시기를 전후하여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고통을 겪었던 북한경제가 2023년을 기점으로 플러스(+)의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북한경제는 이제 본격적인 회복세 또는 성장세에 접어든 것일까?

1. 2016~19년 북한경제: 장기적 침체의 시작과 고통

그간의 북한경제가 2016~17년 실시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경제제재에 따른 대외교역의 부정적 감소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던 북한경제가 일시에 장기적인 침체 추세에 빠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교역은 제재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북제재의 초점이 북한의 외화 수입과 관련된 수출 제한 조치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대중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이것이 다시 북한의 수입을 감소시켜 결국에는 북한의 전체 교역규모 자체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대북제재 이전인 2015년과

〈표 1〉 북한의 성장률과 대중국 무역액 추이(2015~23)

(단위: %,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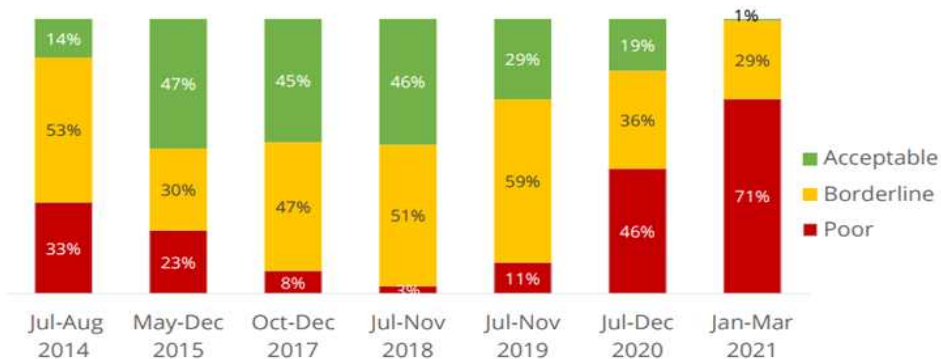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GDP 성장률(%)		-1.1	3.9	-3.5	-4.1	0.4	-4.5	-0.1	-0.2	3.1
대중국 교역 (억달러)	수출	25.68	25.72	17.31	2.13	2.15	0.48	0.58	1.34	2.92
	수입	29.43	27.64	32.45	22.17	25.74	4.91	2.43	8.33	20.13
	전체	55.11	53.37	49.76	24.30	27.89	5.39	3.01	9.67	23.05

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검색일: 2024. 7. 29).

비교해 볼 때 북한 대외교역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교역량의 경우 2019년 수출은 8%, 수입은 87%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교역의 감소가 북한의 실물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미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북한 GDP 성장률 추정치를 살펴보면, 그 수치는 2017년 이후 사실상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대 초·중반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었던 북한의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의미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시장경제활동이다. 그간 북한의 시장은 어떤 외부의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확대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2016~17년 대북제재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북한경제 유입되는 외화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평양의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 심각한 하락 현상이 나타났으며, 일상적인 시장거래에서조차 상당한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시장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벌어진 것이다.²⁾ 이렇게 보면 2016~17

[그림 1] 북한의 식량소비점수 추이(2014~21)



주: "Food Security Situation in DPRK over a two-year lockdown Trends and Prospects," WFP, September 2022.

2) 이에 대해서는 KDI 북한경제리뷰가 매년 1월 특집호로 게재하는 북한의 거시경제 동향 분석 논문들을 참고하라.

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는 대외교역과 실물경제, 그리고 시장활동 모두에서 심각하고도 장기적인 경제침체 현상이 일반화되었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2. 2020~22년 코로나와 북한경제: 절대적 결핍

그런데 이러한 경제 침체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 당국의 코로나 경제봉쇄로 인해 그나마 남아 있던 대외교역량조차 사실상 ‘제로(0)’의 수준으로 급락하였고, 코로나 통제를 위한 지역 봉쇄와 경제활동 제한으로 인해 공식 경제와 시장경제 모두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2020~22년 북한경제에서는 이른바 ‘절대적 결핍(absolute shortage)’ 현상이 일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1]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북한을 대상으로 꾸준한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을 수행해 왔다. [그림 1]은 이중 WFP(World Food Program: 국제식량기구) 북한 사무소가 코로나 시기를 전후한 북한주민들의 식량소비점수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수치는 조금 충격적이다. 코로나 이전 북한주민들 가운데 식량 소비가 적절한(appropriate) 수준이라고 판단된 비중은 대략 30% 내외를 유지했던 것에 반해, 코로나 이후에는 이 수치가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주민들 거의가 코로나 시기에 들어 적절한 식량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를 특징짓는 절대적 식량부족 현상이 2020~22년 코로나 시기의 북한경제에서 또다시 문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이다. 물론 2020~22년 코로나 시기의 북한 식량 사정을 1990년대 중 후반의 기근(famine) 시기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지도 모른다. 양자가 처해있던 북한의 경제 환경과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식량을 둘러싼 전반적 경제시스템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22년 코로나 시기의 북한경제에서 식량의 절대적 결핍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현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별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³⁾.

이처럼 2016~17년 대북제재로 인해 장기적인 침체에 돌입한 북한경제는 2020~22년 코로나 시기에는 절대적 결핍이라는 추가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22~23년을 기점으로 북한 당국이 왜 서둘러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선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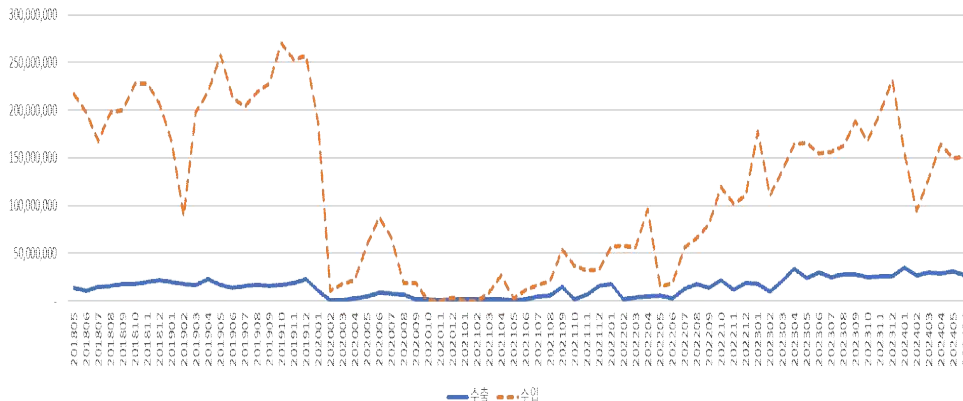
3) 실제로 코로나 시기 북한에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관찰 결과가 꾸준히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KBS뉴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북한 아사자 속출”...통제 강화에 공개 처형 일상화」 2024. 5. 4(검색일: 2024. 7. 29).

대외교역을 재개하고자 노력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노력은 이후의 북한경제 성장률과 대외교역 수치들을 빠르게 호전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현재의 북한경제는 정말로 양호해진 것일까?

3. 2023~24년 현재의 북한경제: 거시경제적 혼란과 진실의 순간

이와 관련 [그림 2]와 [그림 3]은 매우 흥미롭다. 우선 [그림 2]는 2022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대중국 교역량이 월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나타난 수치는 다소 예상외이다. 물론 북한의 교역량은 코로나 시기에 비해 늘었다. 그러나 그 폭은 크지 않다. 아니,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마치 어떤 상방 한계치가 존재하는 것처럼 일정 수준 이하에서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대중국 교역량은 2019년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9년의 북한 교역량은 2016~17년의 대북제재 이후 이미 교역 자체가 사실상 와해된 수준의 것이었다. 더욱이 2020~22년 코로나 봉쇄 시기 동안 교역이 차단되어 2022~23년의 북한경제에서는 경제 유지에 필요한 최우선의 생산 및 소요 물자의 확보 등 최소한의 교역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쥘여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이른바 ‘보복(?) 수요’는 차치하고 2019년의 교역량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에서 교역이 재개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교역량 추세는 2024년 들어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마저 보인다.

[그림 2] 코로나 시기 이후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추이(2018. 5.~202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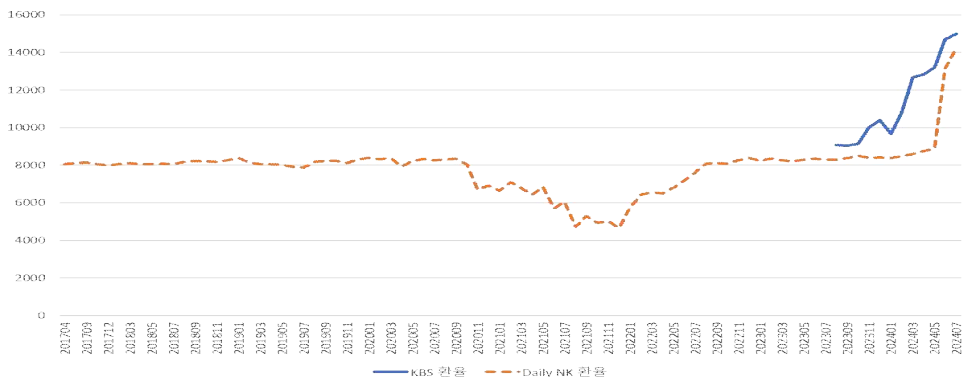


주: 중국해관청(<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4. 7. 26).

그런데 [그림 3]은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북한 당국이 환율 파동이라고 부르는 환율 폭등 현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북한의 환율은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고, 이를 코로나 시기 환율과 비교해 보면 거의 세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⁴⁾ 이는 2022~23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경제에서는 기대했던 것에 전혀 못 미치는 교역량의 증대만이 나타나면서도, 오히려 이러한 교역 증대 추세를 압도해 버리는 내부적인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처럼 흥미로운 현재의 북한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한가지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북한경제가 교역에 동원할 수 있는 외환을 비롯한 여러 자원은 사실상 거의 고갈되어 코로나 상황에서 축적된 최소한의 교역 수요만큼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의 경제주체들 사이에 서로가 외환 등 교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극심한 경쟁이 벌어짐으로써 환율 폭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전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의 GDP 성장률은 3.1%로 양호하다. 그러나 앞에서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성장률 수치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보자. 2023~24년 들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대략 5% 수준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절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중국경제가 좋다는 인식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는 정반대로 현재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코로나 이후 Re-opening이 시작되면서 경제 전반이 빠르게

[그림 3] 코로나 시기를 전후한 북한의 환율 추이



주: Daily NK, <https://www.dailynk.com/market/>, (검색일: 2024. 7. 29). / 『KBS 뉴스』, 「“환율 잡아” 김정은 지시에도 속수무책…북한 환율 사상 최고, 물가 들쭉», 2024. 5. 23(검색일: 2024. 7. 29).

4) 『KBS뉴스』, 「청장 뚫린 북한 환율…“당국이 손댈수록 상황 악화”», 2024. 7. 5(검색일: 2024. 7. 29).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중국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점들이 모두 한꺼번에 터져 나와 기존의 (성장)모델 자체가 기능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와 파산 등 이의 부작용, 기업과 금융 전반에 걸친 부채 문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실업 문제, 미·중 갈등에 따른 교역 문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제적 압박과 과잉 투자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경제의 핵심은 절대적인 수치 면에서 높게 나타나는 성장률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구조적 문제라고 보아야 하며,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존 중국경제 성장 모델의 한계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현재의 북한경제 역시 3.1%라는 플러스(+)의 성장률에 크게 눈길이 가지 않는다. 이는 2016~17년 이후 장기간에 걸친 북한의 경기 침체와 거듭되는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일종의 기저효과에 불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그간 북한경제에 누적된 최소 교역 수요마저 해소할 수 없는 미미한 교역량의 증대 및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환율 폭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불안정 등이 더욱 현재의 북한경제를 특징짓는 핵심적 요인들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우선 앞선 [그림 3]에 나타나는 환율 폭등 현상을 누가 주도했는지 생각해 보자. 아마도 이는 북한에서 시장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아니라 북한의 국영기업을 비롯한 공식경제부문에서, 그것도 북한 내부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경제주체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2022~23년을 기점으로 대외교역을 재개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시장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민간경제주체들이 (밀수 등을 포함하여) 이에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역 재개의 초기에는 공식부문, 그중에서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부문의 수요를 먼저 충당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부문의 경제주체들이 우선 교역에 나서려 할 것이며, 그 결과 이들 사이의 외화 확보 경쟁으로 환율이 폭등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환율 파동에 대한 언급과 지시’ 역시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이러한 현상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의 이름 모를 경제주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옆의 친숙하고도 중요한 경제주체들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최고 지도자 스스로가 느끼는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의 정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24년 들어서도 여전히 북한의 환율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이는 북한 공식부문의 중요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도 북한 당국의 통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을 2016~17년의 대북제재와 2020~22년의 코로나 시기의 북한경제 추세와 연결시켜보면 현재의 북한경제는 결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5%의 성장률을 보이는 현재의 중국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팽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북한경제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경제는 2016~17년의 대북제재 이후 장기적인 침체를 겪었으며, 2020~22년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러한 침체가 악화되어 절대적 결핍의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2022~23년 Re-opening을 시도하였으나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교역 확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에서 환율 폭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불안정성은 북한 공식부문의 중요 경제주체들로부터 기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적이라면 이는 북한 당국의 경제적 통제가 이제는 공식부문 내부의 중요 경제주체들 사이에도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것의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2016~17년의 대북제재로 촉발된 북한경제의 악화 추세가 이제는 거의 경제적으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역 감소로 시작된 경제적 문제가 실물부문과 시장의 약화를 거쳐 주민들의 삶을 저하하고, 결국에는 공식부문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제력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오늘날 북한경제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모든 사회적 현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복합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특정의 경제적 요인 하나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지난 30여 년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북한경제는 이러한 경제적 고통과 한계를 버텨내는 일에 매우 특이한 장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2016~17년의 대북제재와 같은 현재의 북한경제 환경이 앞으로도 유지되는 한, 김정은 시대의 기존 북한경제시스템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화의 시점은 앞으로 더욱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III. 변화를 위한 선택의 길: 비핵화와 개혁개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4년 현재 북한경제는 불가피한 변화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북한경제에 가장 바람직할까? 조금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현재에도 변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정답은 과거보다 더욱더 타당할지

모른다. 북한 당국이 비핵화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경제 개혁과 개방에 나서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길만이 북한과 같이 퇴행한 (舊)사회주의 경제가 현존하는 세계 경제에 참여하여 진정한 의미의 전면적 경제발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길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이제까지보다 더욱 북한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 2024년 북한경제에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

비핵화와 개혁개방이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경제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경제학자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비핵화와 개혁개방이 북한경제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은 약간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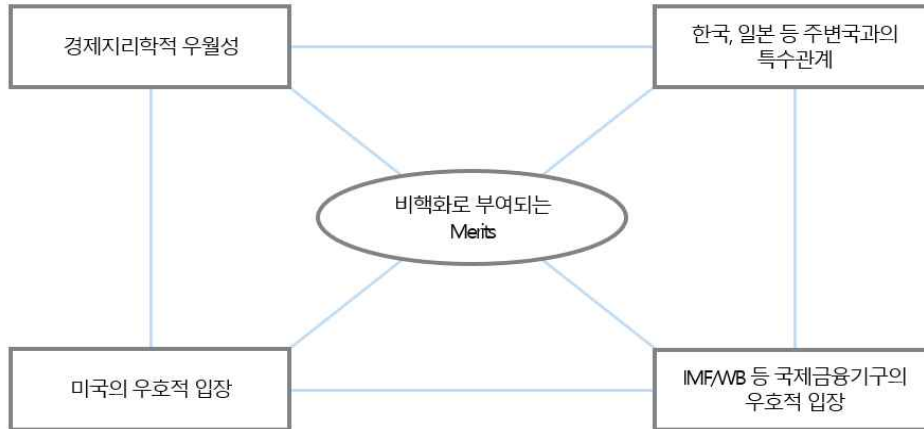
비록 개혁과 개방이 북한과 같은 (舊)사회주의 경제가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들 (舊)사회주의 경제 모두가 개혁개방의 시작부터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 대부분은 개혁과 개방의 초기 시기 경제시스템이 혼란에 빠지고, 실물경제가 후퇴함으로써 상당수의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본격적인 경제발전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의 매우 긴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새로운 시장경제와 세계 경제의 질서와 제도, 관행 등에 익숙지 않음으로 인해 이에 적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시스템이 무력화되면서 내부적인 혼란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개혁과 개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국과 국제 경제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았다. 국제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여전히 제도와 시스템, 관행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위험성 높은 국가에 불과했고,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곧바로 뒤따르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정치적 이유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위시한 광범위한 투자는 요원하였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국제 경제는 이들에게 상당 수준의 조건성(conditionality)을 먼저 부과하는 경향마저 있었다. 이들이 국제 경제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의 본격적 지원과 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이들의 경제시스템과 제도, 관행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동유럽의 (舊)사회주의 경제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작했을 때 이들은 곧바로 EU와

같은 서유럽의 경제시스템에 가입하여 이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얻어낸 것이 아니었다. EU의 가입을 위해서는 이들 스스로가 먼저 EU가 요구하는 특정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했고, 이러한 작업은 대부분 이들 국가 스스로가 고통을 감내하며 실행해야만 했었다. 그 결과 동유럽 국가들 대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헝가리의 경우, ‘헝가리를 판매한다(Hungary for Sale)’고 하는 자조 섞인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제적 과정들을 경험하였다. 더욱이 어떤 국가들의 경우 스스로의 경제·지리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아서, 이러한 조건성을 충족할 기회마저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경향도 있었다. 실제로 바다에 인접하지 않아 어떤 항구도 존재하지 않는 빈곤한 내륙지역 국가들의 경우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의지를 갖추고 있어도 이를 현실로 구현하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이들 (舊)사회주의 경제 가운데 일부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 비록 경제학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세계 경제에서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동의할 것이다. 무엇보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미국은 특정한 국가의 경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종의 ‘상징’을 부여하는 국가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어떤 나라에 대해 ‘테러 지원국’이라는 부정적 상징을 부여하는 경우, 이 나라는 국제 경제에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수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능력을 이용하여 실제로 현재의 세계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경제기구들을 사실상 통솔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제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 IMF와 World Bank를 위시하여 수많은 국제기구와 민간기구들이 이에 속한다. 더욱이 미국의 시장은 현실적으로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중심지로써 이에 진출하는가, 못 하는가의 여부는 단순히 미국시장 한 곳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 전체로 진출하는가 못 하는가의 문제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중심으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막대한 투자 자본을 보유한 나라이다. 이에 따라 어떤 나라이든 현재의 세계경제에서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 무차별적으로 우호적인 나라는 아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과거 미국과의 전쟁 경험으로 인해 도이머이정책이 실행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미국과의 관계 발전에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도이머이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림 4]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2024년 현재의 북한경제는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 이제까지 개혁개방을 실시했던 어떤 (舊)사회주의 경제들보다 본격적인 경제발전 전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낼 수 있음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현재 경제·지리적 환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경제발전에 유리하다. 북한이 위치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 지역은 세계 GDP의 1/3을 생산하는 거대 경제권역으로 국제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리고 북한은 경제·지리적으로 이들 국가를 포함한 세계와 육로 및 항공, 그리고 바다와 항구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경제수준은 이들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한국과 일본의 1인당 소득이 대략 3~4만달러 수준, 그리고 중국의 소득이 대략 1만달러를 넘는 수준인 반면, 북한은 여전히 1,0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인구 측면에서도 이들 국가에 비해 적게는 수배, 많게는 수십 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적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조건에서는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이들과 정상적인 경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한경제는 비약적인 성장 속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의 북한경제는 ‘비핵화’라는 ‘만능의 보검’을 갖고 있다. 만일 북한이 이러한 만능의 보검을 휘두른다면 경제의 개혁과 개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하고 개혁과 개방의 초기에서부터 극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관계를 보자. 현재 국제경제에서는 어떤 나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과의 현실적인 힘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데다, 미국 스스로가

다른 나라에 여러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북한이 비핵화라는 보증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이를 위해서라면 미국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보상도 논의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이 북한경제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여러 부정적 상징을 제거하여 이를 우호적인 상징들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통솔하는 각종 국제 경제의 기구들이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끔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시장을 열고, 심지어는 미국의 자본이 곧바로 북한에 직접 투자되는 것 역시 용인하거나 권장할지 모른다. 과거 소비에트 경제가 몰락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시작되었을 때, 미국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UN을 통해 소비에트의 IMF 가입을 지원하고, 맥도날드라는 상징적인 미국자본을 소비에트 현지에 진출시키는 것과 유사한 일이 북한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서 ‘북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북한의 밝은 경제적 미래(Bright Economic Future)’를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라는 만능의 보증을 사용하는 경우 세계 어느 나라도 쉽지 않은 미국과의 관계를 일거에 뒤집어 놓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개혁과 개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여러 어려움 역시 일거에 해소될지 모른다. 무엇보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의 아주 초기의 시기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해외의) 자금 확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차치하고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북한에 유입될 개연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북한과 관계 개선과 더불어 이른바 ‘(한반도) 식민지 시절에 대한 배상금 또는 청구권 자금’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물론 이의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대략 2024년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그 규모는 심지어 100억달러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현재 북한의 전체 GDP에 맞먹는 막대한 자금이 일거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어떨까?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통일을 염두에 둔 특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러한 북한에서 비핵화를 시작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자금을 북한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발전 자금 문제와 함께 개혁과 개방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의 부족, 제도와 시스템의 불비, 초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부 경제 혼란 등 역시 쉽고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IMF와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은 물론,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이미 이러한 과정을 역사적으로 경험해 온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협력 역시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개혁과 개방에 나선다면 북한경제로서는 이제까지 어떤 다른 나라 보다도 더욱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매우 초기부터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판단은 2024년 현재의 북한경제라는 시점에서 더욱 유효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현재의 시점이야말로, 시쳇말로 북한이 ‘가장 높은 가격에 비핵화를 판매’할 수 있는 적기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 경제의 공급망 재편 등 현재의 시점이 미래의 세계 경제 질서 형성에 대한 실질적 움직임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점이다.

우선 국제사회는 현재 북한이 사실상 핵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핵 개발을 완성하지 못한 과거의 시점에 비해 현재의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특히 현재의 세계는 미·중 갈등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외교·군사·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은 이에 노력해 온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당연히 이는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가격 매김(Pricing)’에 있어 현재가 매우 유리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만일 시간이 더욱 지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는 새로운 옵션 개발에 몰두할 것이고, 그 결과 설사 북한이 비핵화라는 옵션을 다시 들고나와도 이의 ‘가격 매김(Pricing)’ 환경은 결코 더욱 유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국제 경제는 미·중 갈등을 배경으로 새로운 국제 공급망 형성 등 새로운 미래 경제의 질서 구축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의 시점에서 비핵화를 통해 개혁과 개방에 나선다는 의미는 이러한 미래의 세계 경제 질서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끝자락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만일 시간이 더욱 지나, 미래의 세계 경제 질서가 이미 확고해지고 북한이 이에 배제된다면, 과거 1945~50년 외부 환경으로 인해 국제 사회주의 경제질서에 편입되어 현재와 같은 장기간의 경제적 피해를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현실이 북한의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2. 2024년 북한경제의 개혁개방과 미래의 성장률

〈표 2〉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만일 북한경제가 2024년 현재의 시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진한다면 미래의 북한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몇 가지 간단한 수치와 가정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이다.

물론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없고, 여기에서 사용된 수치와 가정 역시 매우 축약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이기까지 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무작정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 작업으로 인해 앞선 논의를 불확실하나마 조금은 ‘만져(?)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점만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암묵적 가정과 다른 한 가지의 명시적 가정, 그리고 네 곳의 준거 국가(군)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2024년 이후의 북한경제에 적용하였다. 암묵적 가정이란 2024년 현재 북한이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에 돌입하여, 현재 북한경제에 부과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제재들이 모두 철폐되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작했다는 가정이다. 명시적 가정이란, 앞에서의 논의처럼 이 경우 북한경제는 이제까지 어떤 나라의 경험보다도 더욱 빠르게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북한경제의 성장 속도를 비교 추론하기 위해 과거 한국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 경제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이 일어난 시기의 성장률을 추출하는 동시에, 2000~20년의 기간 World Bank가 제공하는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 가운데 가장 높은 상위 10개국의 성장률을 추출하여, 이들 네 가지 성장률을 미래 북한 성장률의 준거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그리고는 이들 데이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미래의 북한경제에 적용하였다. 첫째는 이들 데이터를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경우 미래의 성장은 주로 개혁개방에 따른 추가적 자본의 투입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표 2〉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따른 2025~45년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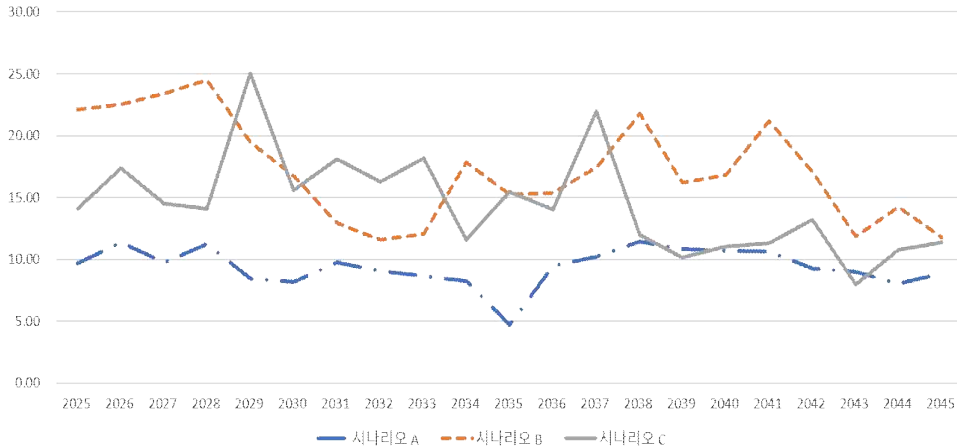
(단위: %)

연도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한국, 중국, 베트남 고도 성장기 성장률 기준	총고정자본형성과 ICOR 기준	2000~20년 연도별 세계 고성장 상위 10개국 성장률 기준
2025	9.65	22.11	14.07
2030	8.16	16.72	15.60
2035	4.75	15.25	15.48
2040	10.71	16.78	11.04
2045	8.83	11.77	11.35
초기 10년	9.00	16.79	16.38
후기 10년	9.85	15.64	12.38
전체 20년	9.41	16.13	14.48

자료: 저자 작성.

[참고 1] 2025~45년 연간 경제성장률 추세

(단위: %)



경우 관련 기간 동안 자본의 확충 정도를 계산하여, 이를 북한에 적용함으로써 미래 북한의 성장률을 추정하는 방식이다.⁵⁾

[참고 1]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된 북한의 미래 성장률 추세를 보여준다.⁶⁾ 그런데 그 수치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랍다. 이에 따르면 2024년 북한이 비핵화에 들어서고, 본격적 개혁개방을 추진함으로써 대북제재의 해소는 물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폭적 경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2025~45년의 20년 동안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최소 평균 9.4%, 최대 16.1%로 판명되었다. 우선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고도 성장기 성장률을 그대로 적용한 시나리오 A의 경우 2025년을 기점으로 하는 북한의 성장률은 초기 10년 동안 평균 9%, 후기 10년 9.9%로 20년 전체의 기간 평균 9.4%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2000~20년의 연도별 상위 성장률 10개국의 평균 성장률 수치를 북한에 적용한 시나리오 C에서 2025~45년 북한 성장률은 초기 10년 동안 평균 16.4%, 그리고 후기 10년에는 평균 12.4%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에 미래 북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시나리오 B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고도 성장기 시절 자본 증가량과 이의 성장률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정식화하여 북한에 적용하였다. 그

5) 이는 ICOR(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라는 매우 실용적인 개념을 활용하여 과거 한국, 중국, 베트남의 자본과 산출량의 관계를 계산하고, 이를 미래의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의 성장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본문의 지면 한계상 이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나, 필요한 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6) 물론 실제의 추정은 2025~45년 동안 북한의 매해 연평균 성장률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다만, 본문의 <표 3>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이를 축약하여 제공한다. 필요한 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결과 모두가 제공 가능하다.

결과 2025~45년의 초기 10년 동안 북한의 성장률은 평균 16.8%, 후기 10년 동안은 연평균 15.6%를 기록하여 전체로는 평균 16.1%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성장률로 인해 미래 북한의 GDP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2024년 북한의 GDP를 총 282억달러, 1인당 1,265달러로 임의로 가정하였다. 이는 2020년 이후 한국 원화 기준으로 추정한 북한의 GNI를 참고하여 우리가 가장 근접한 달러화 기준 GDP 수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에 위의 시물레이션 형식으로 도출한 북한의 미래 성장률 수치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 중의 GDP를 계산해 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래 북한의 GDP는 2025년 309~345억달러에서 2045년에는 1,861~7,858억달러로 최소 6배에서 최대 22배 이상으로 증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이 기간에 북한 인구에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1인당 GDP 역시 2025년의 1,377~1,533달러에서 2045년에는 최소 8,282달러, 최대 34,967달러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2025~45년의 기간 북한의 1인당 GDP가 현재의 베트남 수준을 훨씬 추월하는 것은 물론, 현재 중국의 수준을 추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2020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시물레이션 수치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충격적이다. 물론, 이미 언급했듯이 이들 수치는 실제의 현실이라기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수치 연습에 더욱 가깝다. 따라서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거나 너무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치가 내포하는 함의만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비핵화와 개혁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미래 북한경제는 이제까지

〈표 3〉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따른 2025~45년 북한의 GDP 추정

(단위: 억달러)

연도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한국, 중국, 베트남 고도 성장기 성장률 기준	총고정자본형성과 ICOR 기준	2000~20년 연도별 세계 고성장 상위 10개국 성장률 기준
2025	309	345	322
2030	493	904	713
2035	728	1,733	1,491
2040	1,201	3,881	2,841
2045	1,861	7,858	4,767

자료: 저자 작성.

〈표 4〉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따른 2025~45년 북한의 1인당 GDP 추정

(단위: 달러)

연도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한국, 중국, 베트남 고도 성장기 성장률 기준	총고정자본형성과 ICOR 기준	2000~20년 연도별 세계 고성장 상위 10개국 성장률 기준
2025	1,377	1,533	1,432
2030	2,195	4,022	3,174
2035	3,238	7,713	6,636
2040	5,345	17,271	12,642
2045	8,282	34,967	21,213

자료: 저자 작성.

역사상 어느 경제도 쉽게 달성하지 못했던 급속한 고속 성장을 구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고속 성장은 미래 북한주민들의 삶의 모습 역시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3. 개혁개방에 따른 미래 북한경제의 삶

예를 들어, 〈표 5〉를 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미래 북한경제가 위와 같은 성장률과 소득을 달성할 경우 북한주민들의 실제 자산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를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으로 2000~20년 기간 World Bank가 제공하는 세계 각국의 소득 자료와 주택가격 데이터를 패널 회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북한에 적용하였다. 〈표 5〉는 이렇게 추정된 미래 북한의 주택가격 증가 수준을 나타낸다.⁷⁾ 이에 따르면 주택가격으로 표현한 북한의 자산 지수는 2025~45년의 기간 작게는 5배, 크게는 20배 가까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일 2025년 현재 평양에 10만달러의 주택을 소유한 주민이 있다면, 그 주택의 가치는 2045년 최대 200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소득과 더불어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주민들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수록 그들이 창출하고 유통하는 소득 증대의 기회는 더욱 넓어지고, 이를 토대로 그들의 소비와 후생 그리고 여타 경제적 활동의 범위와 수준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⁷⁾ 이 역시 실제의 추정은 2025~45년의 기간 북한의 매해 연평균 성장률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다만, 본문의 〈표 4〉에서는 지면 제약으로 이를 축약하여 제공한다.

〈표 5〉 2025~45년 북한 자산 지수 변화 추정(주택가격 기준)

연도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2025	100	100	100
2030	141.5936	233.0124	196.8188
2035	208.8738	446.7933	411.5102
2040	344.8006	1000.449	783.9589
2045	534.3116	2025.559	1315.467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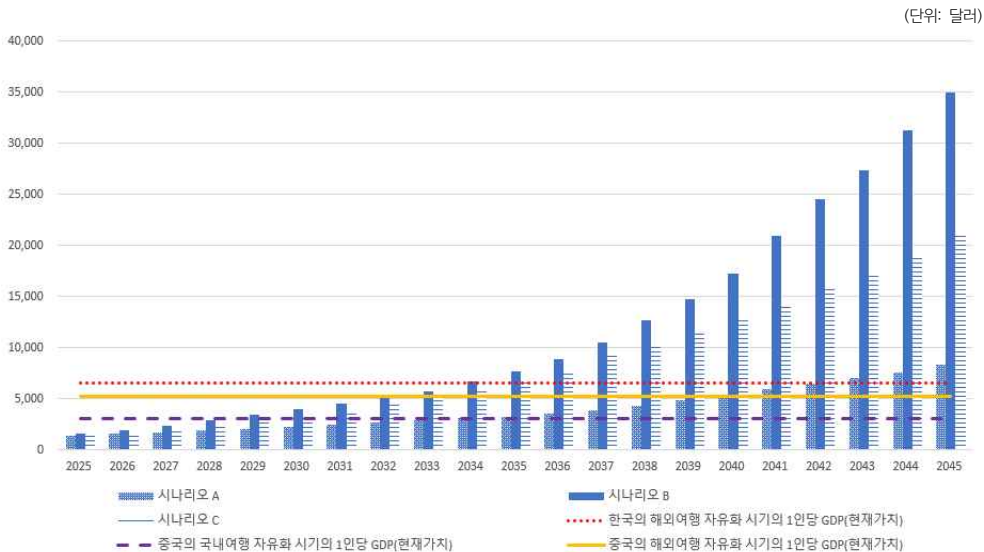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북한주민의 소득과 자산이 증대할 때 이들의 기대 수명과 건강, 식량, 소비 형식, 여가와 휴식 등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동일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 역시 흥미롭다. 2025~45년 북한주민들의 삶의 형식과 수준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급변하는 것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표 6〉과 [그림 5]이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삶의 모습이 기본적으로 바뀌는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여행, 특히 그중에서도 해외여행이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 역시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여타 세계인의 삶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결과 자신이 가진 전통적 삶의 모습에도 변화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의 경우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1980년대 후반에 1인당 소득은 약 3,500달러 내외로 이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6,500달러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여행이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2008년이었는데, 당시 중국의 1인당 GDP 역시 약 3,500달러 내외였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0달러가 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경제의 강력한 호구제도를 통해 철저히 국내 인구이동마저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해외여행 자유화 훨씬 이전인 1997~2003년의 여행 활성화 조치 이후에는 자유로운 국내 여행이 가능했다. 당시의 중국 1인당 GDP는 대략 1,000달러 전후였고, 이의 현재 가치는 약 2,000~3,000달러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향후 북한의 경우에도 현재 가치 기준으로 대략 1인당 소득 최소 약 3,000달러 수준에서는 아무리 당국이 인구 통제를 하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국내 여행이 일어날 것이며, 소득이 5,000~6,500달러를 상회하면 주민들의 본격적인 해외여행 역시 가능해지리라 볼 수 있다. 앞서와 같이 북한의 미래 소득이 빠르게 늘어날 경우 이러한 여행 자유화는 북한주민들로서도 그렇게 먼일이 아니다. 앞선 시뮬레이션처럼 북한경제

〈표 6〉 한국과 중국의 국내 여행 활성화 및 자유화 시기의 1인당 GDP

한국 (해외여행)	자유화 시기	1987년 1인당 GDP	1987년 당시	3,555달러
			2022년 현재 가치	6,516달러
중국 (국내여행)	활성화 시기	1997~2003년 1인당 GDP	1997~2003년 당시	782~1,289달러
			2022년 현재 가치	1,967~3,078달러
중국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2008년(미국) 1인당 GDP	2008년 당시	3,468달러
			2022년 현재 가치	5,183달러

[그림 5] 2020~45 북한의 국내 및 해외 여행 자유화 시기와 1인당 GDP - 한국과 중국의 사례



자료: 저자 작성.

가 빠르게 발전한다면, 2020년대 후반에 이미 북한의 국내 여행은 시작될 것이고, 2030년대 초반에 이르면 해외여행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북한이 본격적인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마음만 먹는다면, 북한경제가 당당한 동북아의 일원으로 빠르게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를 토대로 멀지 않은 장래에 주민들의 삶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변화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김정일은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상해를 돌아보면 ‘천지개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이 있다. 만일 2024년 북한경제가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선택한다면, 이러한 천지개벽은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닌 바로 몇 년 후의 북한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IV. 또 다른 선택: 버티기와 대결, 그리고 북·러 밀착

이제까지 우리는 2024년 현재 북한경제는 불가피한 변화의 순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비핵화와 개혁개방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될 때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북한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덧붙여 이러한 비핵화와 개혁개방이라는 변화가 나타날 때,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크고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을 토론하였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현재의 북한 당국은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핵화는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황폐해진 북한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미 시한이 다한 과거의 사회주의적 경제 통제를 다시 강조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진행 중인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 관계를 새로이 구축하여 국제사회와의 대립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 당국의 움직임은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것일까? 과연 그것은 성공할까?

1. 북·러 밀착의 경제적 해석

결론부터 미리 말한다면, 대답은 아마도 ‘쉽지 않다’일 것이다. 우선 현재의 북한경제를 과거의 사회주의적 통제방식으로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이는 이미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증명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무수히 많이 존재했고, 이는 모두가 실패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자체가 이미 역사 속으로 퇴장하였다. 그나마 중국과 베트남처럼, 사회주의 국가의 틀만은 유지하면서도, 시장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나서 경제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길만이 나름의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개혁개방의 길에서 후퇴하는 순간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그간 광범위한 개혁개방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시진핑 집권 3기를 전후하여 기존의 사회주의적 경제원칙을 강조하면서부터는 다양한 내재적 문제들이 터져 나와 현재와 같은 경제적 곤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다시금 강조하여 복원에 성공한다면, 아마도 이는 이제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적 기적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그러나 누구나 알듯이 ‘기적은 언제나 어렵다’.

그렇다면 2023년부터 본격화된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은 어떻게? 이

역시 경제에 관한 한 그 효과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직접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중국과 달리 북한의 경제발전에 드는 모든 물자와 소재, 기술, 제도 등을 공급해 줄 수도 없고, 대규모 시장을 제공해 줄 수도 없으며, 이를 매개로 북한과 국제 경제를 연결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다(<표 7>에 나타난 북한의 대중국 교역과 대러시아 교역의 차이를 보라). 북한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 등 일부 물자를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공급해 주고, 여기에 약간의 플러스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나라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적 시각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북한경제 상황을 ‘감내하고 버티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북한을 진정한 경제발전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현재 진행형인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중대한 의미의 경제협력을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일부 시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전쟁물자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그 대가의 일환으로 에너지와 식량을 위시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수행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현재 진행형인 북·러 협력이 군사와 경제를 서로 교환하는 복합적 상호지원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시각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만일 그렇다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서로의 협력관계를 둘러싸고 매우 분명한 시간 불일치(Time Inconsistency)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러 협력에 나서는 기본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임이 분명하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북한산 전쟁물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바라보는 북·러 협력의 시간 지평선(Time Horizon)은 매우 단기가 될 수밖에 없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 잡아 보았자 1~2년이 고작일 것이다. 그런데 만일 현재의 북·러 협력이 군사-경제 상호지원체계 구축이라면 북한의 시간 지평선은 어떻게 될까? 아마 이보다 훨씬 더 길 것이다. 경제협력의 경우 수개월은 물론 1~2년 안에도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표 7> 북한의 대외 수입 비교: 중국 vs. 대러시아

(단위: 억달러, 개)

2015				2019			
대중국		대러시아		대중국		대러시아	
수입액	수입품목수 (HS4)	수입액	수입품목수 (HS4)	수입액	수입품목수 (HS4)	수입액	수입품목수 (HS4)
28.9	899	0.8	277	25.2	761	0.5	194

주: UN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 접속일: 2024. 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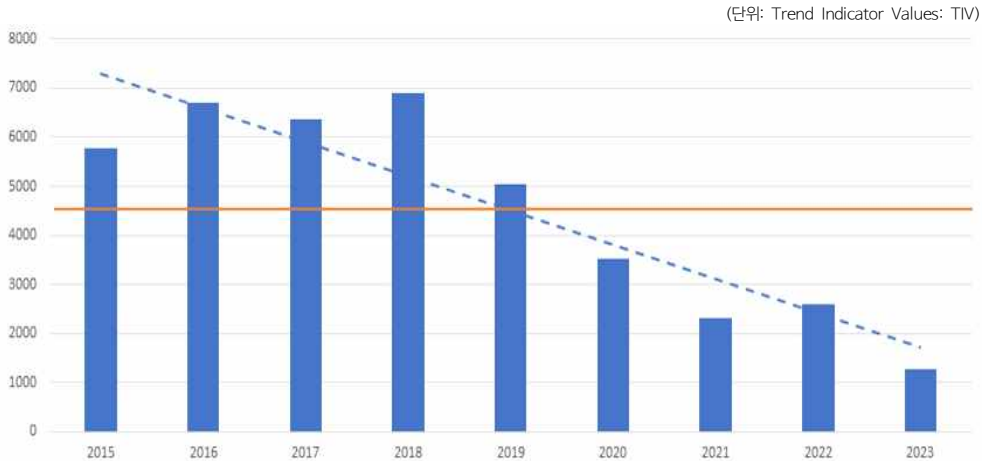
초기의 이처럼 짧은 기간에는 미래의 더욱 많은 협력 수익을 기대하여 막대한 비용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현재의 북·러 협력이 상호 간의 군사-경제 상호지원체계 구축이라면 이러한 시간 불일치의 문제로 인해 북한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과연 북한 당국과 같이 러시아를 오래 상대해 보고, 또한 미국 등 주변국을 상대로 능수능란한 협상 실력을 나타냈던 당사자가 이를 모를까?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북·러 협력이 상호 간의 군사-경제 상호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시각에는 중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를 상호 간 군사협력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지도 모른다. 러시아와 유사하게 북한 역시 이를 외부로 나타나는 정치적인 수사는 어떻게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단기간의) 전쟁물자 판매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만일 이렇다면, 2024년 현재 북한경제에 있어 현실의 북·러 협력은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에 대한 전쟁물자 판매의 대가로 일부 식량과 에너지 등을 확보하여 북한경제가 버티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역시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예외적인 가능성

그런데 여기에는 한가지, 조금 극단적이지만, 예외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만일 러시아가 현재 북한과 협력은 물론, 향후 일어날 러시아의 장기적인 군수산업 재편에 있어서까지 여전히 북한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6]을 보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세계 제2위의 군수물자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수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물자를 북한에 요청할 정도로 군수물자 생산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군수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거의 황폐화해져 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러시아는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설사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일정 수준 이하로 군수산업을 퇴보하도록 놓아두기가 힘든 나라이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군수산업을 복원 재편하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군수물자 수출시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군수산업의 특성상 비용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확보가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러시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향후 이러한 군수산업 복원 재편과정에서도 북한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현재의 북·러 협력의 성격은 매우 달라진다. 이 경우 북한과 러시아

[그림 6] 러시아의 무기 수출액 추이(2015~23)



주: SIPRI(<https://armstransfers.sipri.org/ArmsTransfer/ImportExport>, 접속일: 2024. 6. 26).

사이의 시간 불일치의 문제는 미래의 군수산업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은 2024년 현재 북한경제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만일 북한이 미래 러시아의 군수산업 생산 및 공급망의 일원으로 포함된다면, 이를 통한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소규모의 북한경제가 자체적인 여러 경제 현안을 장기간에 걸쳐 무리 없이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얻기 때문이다.

3. 기본적인 위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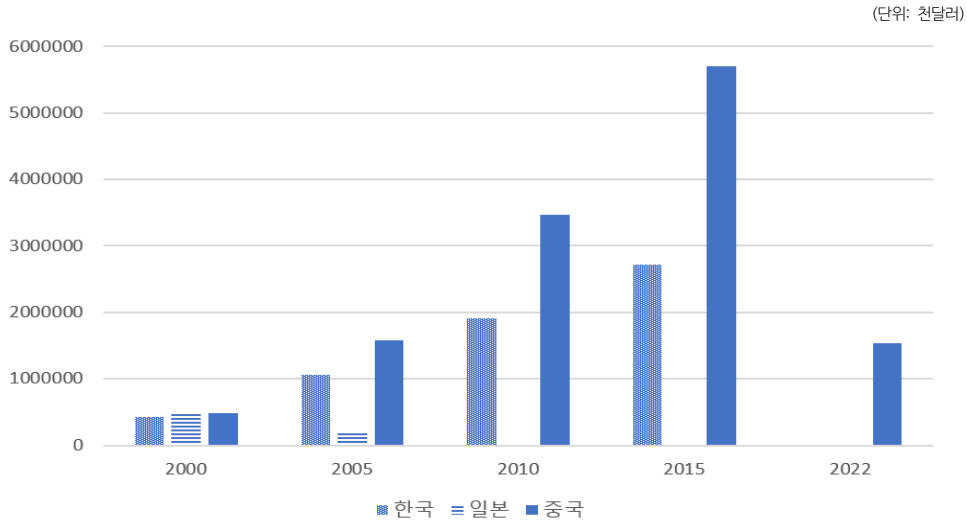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예외적인 가능성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결코 높지 않다. 그리고 설사 이러한 예외적인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경제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회이기보다는 위기의 성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북·러 협력과 관련된 중국 요인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해서 보면 현재의 북·러 협력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징벌할 유인마저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중국경제는 다양한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의 근원적 배경에는 미국의 견제와 압박이 존재한다. 물론 미국이 중국과의 모든 경제 관계를 차단하거나, 이를 전면 수정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차세대 미래 산업만큼은 중국의 도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중국의 해당 산업 발전을 압박하는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전기차와 배터리, 통신 등 미국과 국제 경제가 바라보는 미래의 전략 산업에서 대중국 견제와 압박이 그것이다. 문제는 중국 역시 이러한 미래 차세대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중국은 이들 산업에 있어 미국과 기술 격차를 의식하여 이제까지 수많은 ‘과잉 및 중복’ 투자를 수행하는 등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해당 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과잉 및 중복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투자 자금을 가능한 한 빠르게 회수하고 해외 경쟁자들을 조기에 탈락시켜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쥐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성공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입장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세 곳의 시장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첫째는 미국시장이며, 둘째는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그리고 셋째는 유럽시장이다. 사실상 이들 시장이 차세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중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국의 접근을 아예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의 동맹으로서 시장을 공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유럽시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일 유럽시장에서마저 배제된다면 중국 차세대 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며, 이는 곧 중국경제 전체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는 의미와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이제 전쟁을 위해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북·러 협력을 지원하여 유럽 전체와 적대하기도 쉽지 않으며, 반대로 전통적으로 관계가 깊고, 군사·안보적으로도 도외시킬 수 없는 북한과 러시아 양자 모두에게 대항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북·러 협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잡음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유인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압박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북·러 협력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압박을 불러올 위험을 내포하는 사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압박은 현재와 미래의 북·러 협력이 가져올 그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도 현재의 북한경제에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림 7] 북한의 주변국 대외무역 추이(2000~현재)



주: KOSIS(<https://kosis.kr/index/index.do>, 접속일: 2023. 6. 26).

이와 관련 [그림 7]을 보자. 1990년대 중후반의 극심한 경제위기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인 근원적인 이유는 북한의 대외교역이 2000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대외교역은 세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다. 그런데 2000년대 초중반 북한의 일본 여고생 납치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북·일 교역을 완전히 단절하는 대북제재를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주요 거래 상대국은 한국과 중국으로 좁혀졌다. 그런데 한국 역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단행하였고, 남아 있던 개성공단 역시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북한의 교역상대국은 거의 유일하게 중국만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북·러 협력의 부작용으로 중국마저 대북 교역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리 현재 북한의 등 뒤에 러시아가 있다고 해도 북한경제가 입는 충격은 아마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2024년 현재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북한당국이 보이는 정책은 결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폐쇄화된 북한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이미 시효가 사라진 사회주의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공장 속의 허구처럼 느껴지며, 북·러 협력을 활용해 경제의 버티기를 지속하겠다는 것 역시 득보다는 실의 위험이 더욱 클 가능성이 판단이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만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답이

분명히 존재하는 데에도, 경제 외적인 이유에서 북한 당국이 이를 아예 무시하거나 실행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다른 방안을 짜내어 보려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V. 결론

이 글에서 우리는 2024년 현재의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북한경제는 어떤 선택을 할지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북한의 경제 추세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경험적인 관측치로부터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경제가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때 펼쳐지는 미래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 동시에, 이와 반대로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북·러 밀착과 같은 또 다른 버티기와 대결 구도를 고집하는 경우의 미래 모습 역시도 토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달한 결론들은 아마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2024년 현재 북한경제는 변화를 위한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에 직면하고 있다. 2010년대 초·중반 중국과의 교역을 토대로 반짝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던 북한경제는 2016~17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대외교역과 실물경제 그리고 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입는 장기적인 침체와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이에 더해 2020~22년의 코로나 사태는 절대적 결핍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함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북한경제에 부과하였다. 더욱이 2022~23년 이후 시도되고 있는 대외교역의 재개는 이러한 고통과 피해를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환율 폭등이라는 거시경제적 불안정성과 북한 당국의 주요 공식 경제주체들에 대한 통제력 이완이라는 또 다른 문제만을 양산하고 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북한경제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근원적이고도 전면적인 북한경제의 변화가 바로 코 앞에 와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경제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대한 정답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한다. 바로 비핵화와 개혁개방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답은 2024년 현재의 북한경제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북한 당국이 비핵화라는 ‘만능의 보검’을 휘둘러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이제까지 어떤 나라든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한 급속한 경제적 성취가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추구할 경우 향후 20년 동안 북한의 성장률은 최소 10%에 이르며, 북한의 소득은 2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시뮬레이션 되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스스로가 축적한 자산을 통해 해외여행에 나설 수도 있으며, 자녀들을 국내는 물론 해외의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시킬 수도 있으며, 첨단 소비와 주거는 물론, 보건과 수명, 건강에서도 결코 동북아의 다른 나라들에 크게 뒤지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북한경제가 본격적인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나서면, 얼마 지나지 않아 2020년 현재의 중국이나 베트남 수준을 추월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장기적으로 2020년을 전후한 한국 수준에마져 육박할 정도로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그러나 현실의 북한경제는 여전히 이러한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국제사회와의 대결을 통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재의 북·러 밀착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러 밀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경제에 근원적인 변화를 야기할 만큼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러시아 경제가 진정한 의미의 북한경제 발전을 추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한 경제가 아닌 데다, 무엇보다 북·러 밀착의 당사자인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는 화해하기 힘든 시간 불일치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경제의 입장에서 현재의 북·러 밀착은 중대한 위험요소마저 내포한다. 중국의 불편함과 이에 따른 경제적 대북 징벌 유인의 존재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북·러 밀착은, 에너지와 식량 등 긴급 물자의 보충을 통해 북한경제의 버티기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북한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근원적 변화 필요성에 대한 대안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한 당국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나는 핵을 가진 군사 강국이며, 다른 하나는 주민들의 삶의 고통을 풀어주는 경제 강국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동시에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이러한 현실은 2016~17년 대북제재 이후의 북한경제를 통해 북한 당국은 물론 이미 북한주민들 모두가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 당국은 핵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와 대결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갈아넣어서라도 스스로의 정치적 목적만큼은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그 결과 지난 30여 년간 핵에 대한 비용으로 스스로의 경제적 삶을 희생해 온 북한주민들은 이제 스스로의 미래는 물론, 그들의 자식과 손자들의 미래까지도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지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것이 진정 그들이 원하는 것일까? 이제는 북한 당국이 아니라 북한주민들 모두에게 직접 물어볼 때가 된 것은 아닐까?